

추경예산, 5월국회 처리 가능성 '無'

정부 제출 할달 지나도 국회 심사 착수 못해... 자유한국당 '재해-비재해 분리' 논의 요구 여전 여야 3당 실무협상서 '이견' 만... 29일 현 예결위원들 임기 끝나 새로 구성 시간 더 지체될 듯

정부가 지난달 25일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심사에 착수조차 못함에 따라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대치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에 추경 처리를 완료한다는 밀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였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적시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야 현장에서 사업 집행이 조속히 이뤄져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당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정외투쟁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5월 중 추경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정상화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양측은 지난 21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이같은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은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 24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지만 민주당의 사과 문제를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결과에 대해 "어렵다. 점점 찾아가갈 수 있다고 봤는데 떨어진 것 같아서 아쉽다"며 "(국회 정상화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결국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은 추경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각당이 예결위원들을 새로 구성해야 해 시간이 더 지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40여일이 넘게

국회에 계류됐던 문재인 정부의 앞선 두 차례 추경의 전철을 이반에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4월5일 편성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45일 만인 5월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6월7일 국회에 제출된 11조원 규모 추경 역시 7월22일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 45일이 걸렸다.

게다가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심사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비틀어질 수도 있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의 추경 중 산불·지진과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2조2000억원 규모의 재해 관련 추경만 페어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나머지 추경은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이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의 조건 없이 이 부분에 대해 논의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만큼 재해 추경만이라도 논의하자"며 비재해 추경과의 분리를 거듭 촉구했다.

/뉴시스

"권력기관 개혁, 국민 힘으로 해결된다"

조국 靑 민정수석 "개혁 의지 확고"



1월 23일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의 일문 일담"며 "당시나 지금이나 개혁의지의 확고함은 동일하다. 그러나 지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결국 모든 것은 국민의 힘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에 관련한 발언 보도들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이 공유한 두 건의 기사는 문 대통령의 지난 2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발언과 지난 2013년 1월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월 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힘있게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모두 함께 지지 말고 추진해가자"고 호소했다. 또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기자 실을 방문해 "제도 개혁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2017년 5월 11일 민정수석으로 부임하기 전후 읽었던 2003년

국민의 지지가 더 높고, 당정청의 협력과 단결은 훨씬 탄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개혁을 위한 당정청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은 오남용 근절, 집중된 권한 분산,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민주 '제 식구 감싸기 중단' 강효상, 출당·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기밀 유출'과 관련 자유한국당에 강효상 의원의 출당 및 의원직 사퇴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출당 등 당 차원 조치는 물론 의원직 제명까지 함께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의 외교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간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한 줌도 안되는 공명심으로 외교 기밀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을 실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국당은 강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과 국익 훼손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감과 응당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국민 알권리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강 의원을 감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모내기 후 주민과 대화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북 경주시 옥산마을 모내기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한 해 800명 '공무원범죄' 경찰·법무, 부끄러운 1·2위

지방경찰청 472명·법무부 137명... 국가직 범죄 비율도 오름세

범죄에 가담한 국가공무원이 한 해 8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국가·지방·교육청 등으로 나뉘는데, 국가공무원은 중앙자치단체에 소속돼 일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은 정부청사와 국회의사당, 경찰서, 대법원, 공립학교 등에서 각종 인·허가 및 기타 공무를 맡고 있다.

26일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공무원범죄(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수뢰 등 혐의)를 일으킨 국가공무원은 총 824명이다. 지방경찰청(경찰청) 소속이 4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법무부(137명), 국세청(34명), 교육부(2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범죄는 2013년 624명에서 2017년 824명으로 늘어났다. 범행에 연루된 국가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해마다 1, 2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과 교육부에

소속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비단 절대적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이 차지한 공무원범죄 비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공무원범죄 비율은 2013년 30.9%(2020명 중 624명)에서 2017년 42%(1960명 중 824명)로 상승했다.

때문에 '나랏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공무원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허가를 내줄 게 많은, 이권이 물려있는 부서가 범죄에 연루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며 "직위와 연관된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부처에서 부정부패나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많다는 건 신뢰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적 기대가 높은 직업"이라며 "이는 기강해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7회 무주인물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19
2019.6.5.-6.9.
www.mjff.or.kr